제4장

당당한 책임경찰

제1절 고질적인 반부패 범죄 엄단

제2절 일상생활 속 음성적 불법행위 엄단

제3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문화 정착

제4절 테러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제5절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제6절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



제1절

고질적인 반부패 범죄 엄단

1. 생활 주변의 불공정·편법행위 일소

가. 추진배경

경찰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불이익을 주는 국민생활 주변의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8대 생활적폐 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① 보조금 부정수급 ② 공공기관 인사 · 채용비리 ③ 지역 토착비리 ④ 학사 및 유치원 비리 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⑥ 재건축 재개발 비리 ⑦ 공공분야 갑질 ⑧ 안전분야 부패비리를 상시 단속해왔으며, 2020년에는 8대 생활적폐 사범 총 9,528건 16,05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속 76명)

이와 같은 상시단속 추진 외에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경찰은 '20. 8. 7.부터 11. 14.까지 총 100일 간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으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표 4-1]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중점 단속 대상

중점 단속대상	세부 내용	관련 법률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합원 자격 부정 취득, 불법 전매, 청약 통장 매매, 부정 청약 행위, 부동산 개발예정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기획부동산)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요사항 거짓고지, 고가 거래 담합 · 유도 등	공인중개사법 등
재건축 · 재개발 비리	뇌물 · 리베이트 수수, 공사비 횡령, 각종 문서(서면동의서 등) 위 · 변조	수뢰,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등
공공주택 임대비리	공공주택 불법임대, 임차권 불법양도	공공주택특별법 등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 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투기과열 ·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시 · 도경찰청에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범죄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등 엄정 단속을 추진하였다.

특히, 조직적 불법은 시 · 도경찰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지역의 고질적 부동산질서 교란행위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최대한 특정해 적극적으로 환수했다.

다. 단속 성과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387건 2,140명을 단속하여, 그중 235건 1,692명을 기소 송치하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52건 458명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1,002명으로 단속인원의 46.8%를 차지하였으며,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27.8%) △재개발 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분양시장 교란행위		기획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비리	불법 중개 행위	전세 사기	공공주택 임대비리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합 계	2,140 (100%)	715 (33.4%)	287 (13.4%)	588 (27.5%)	235 (33.4%)	149 (7.0%)	110 (5.1%)	56 (2.6%)
기소송치	1,682	690	203	472	88	92	85	52
수사 중	458	25	84	116	147	57	25	4

△수도권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총 637명을 단속하여 그중 527명을 기소 송치하고,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매매 전문 브

로커 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북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362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84명 등 총 446명을 검거하여 기소 송치하였고, △세종청과 제주청에서는 부동산 개발 호재를 이용하여, 불법 취득 농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전매하여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투자자 등 총 32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을 진행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활용, 범죄수익 보전·자금원 차단

가. 추진 배경

수사의 패러다임이 피의자 처벌 및 실체적 진실 발견에서 피해구제 및 범죄수익 환수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9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 · 제도 및 사무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수사관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그림 4-1] 「2019 범죄수익추적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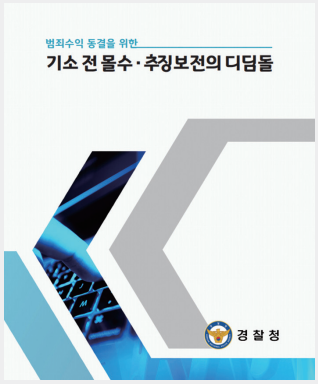
나. 추진 내용

1) 범죄수익 추적 · 보전 기반 마련

그간 경찰은 특정된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여 왔으나,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 · 소비한 경우에는 보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은닉 · 처분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을 통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4-2]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의 디딤돌」



또한, 2020년 범죄수익추적 전담인력도 출범 첫 해인 2019년 51명에서 78명으로 증원되어, 적극적 범죄수익 추적 · 보전 활동 전개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 범죄수익 추적수사 역량 강화

전국 수사관 대상 순회강연, 내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회 개최, 범죄수익추적 사례집 및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매뉴얼 등 책자 발간 · 배포 등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의 범죄수익 추적 · 보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범죄수익추적수사기법 전국 순회강연('20년10~11월)**
전국 수사부서 팀장 및 수사관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익추적 및 회계분석 강의

▶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매뉴얼 발간('20년 10월)**
경찰에 부여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관련 내용 포함, 보전 제도 전반에 대한 책자 발간 · 배포

다. 추진 성과

2020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마약거래방지법」을 통해 확보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이용하여 약 4개월간 319억 5,000만원 상당을 처분 금지함으로써, 새로 시행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켰다.

또한, 2020년 총 보전금액 813억 4,000만원 중 388억 5,000만원(약 40%) 상당의 사기범죄 피해금액을 보전함으로써, 서민경제 피해회복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라. 향후 계획

인력 ·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시 · 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매뉴얼 발간 및 전문화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에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범죄수익 몰수 · 추징보전 관련 법령 ·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조직폭력배의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엄단

가. 추진배경

우리 사회는 산업화 · 국제화 시대를 거치며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날로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치안'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일상생활 속 곳곳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는 폭력 · 갈취 등 고질적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각한 치안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시민과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국민 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영세상인 상대 생계침해형 갈취 및 지역 內 각종 이권개입, 신종 보이스피싱 · 온라인도박사이트 가담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기업형 · 지능형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결조치를 하여 조직의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폭력범죄 근절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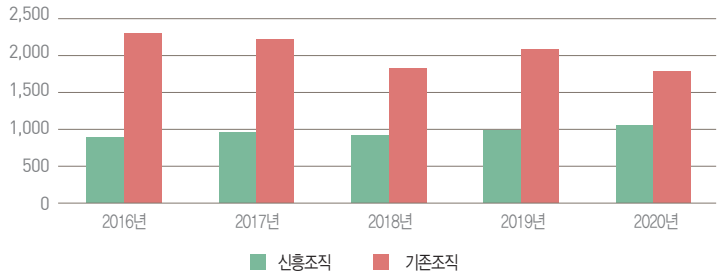
나. 조직폭력배 단속 추진

1) 조직폭력배 검거 현황

경찰은 조직간 세력다툼을 일삼는 전형적인 조폭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 · 성매매 · 불법대부업 ·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 이권에 개입하여 자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신흥 조직폭력배 및 조직성폭력배 140개파 1,070명 등 총 2,817명(구속53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4-3]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단위: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흥조직	893	958	928	998	1,070
기존조직	2,326	2,205	1,766	2,079	1,747



2) 조직폭력배 최근동향

최근 조직폭력배들은 집단 폭력과 위력을 이용하는 점에서는 과거와 같으나, 조직 전체가 노출되는 대규모 집단 패싸움이나 조직간 암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각종 경제적 이권에 소규모로 개입하고 필요시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 · 활동할 경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의해 강력히 처벌되므로, 조직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추종세력을 모아 소 계보를 형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동원 · 활용하는 식으로 점차 '소규모화' 되고 있다.

조직 자금원은 유흥업소 관리 등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여 자금원을 확보하거나 불법채권추심에도 개입하는 등 건설업 · 부동산업 · 사채업 · 주식시장 등으로 활동분야를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불법 게임장을 대규모로 운영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한편,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입증이 어렵도록 간접 폭행, 묵시적 협박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 고도화되고 있으며, 수사대상이 되면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나 증인에 대해 진술 번복 강요,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4-4]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 (단위: 명)

계	폭 력 행 사	갈 취	사행성 불법영업	불법 및 변태영업	탈세 및 사채업	마약류 불법유통등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기타
2,817	1,226	225	245	25	24	50	17	1,005

구성원들의 연령은 20대가 34.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가 70.7%로 활동성이 왕성한 젊은 조직원들이 조직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직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자퇴 · 가출한 청소년 또는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폭력조직에 가입시키거나 학교 주변 10대 불량배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조직폭력배 연령별 검거현황 (단위: 명)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2,817	154	962	876	587	238

주요 조직폭력 검거사례

▶ **도박사이트 운영 및 대포통장 유통 조폭 검거(경기남부청 광수대)**
– '13년~'20년 間 중국 · 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개설, 1조 1천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129명 검거(구속 11명) ※ 범죄수익금 5억4천만원 기소전 몰수보전

▶ **도박 사이트 운영 가담 조직폭력배 검거(대구청 광수대)**
– '16. 1월~'19. 4월 間 해외 카지노 중계업자와 공모하여 9,300억원 상당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 조직폭력배 42명 검거(구속 9명)

▶ **상대 조직원 · 민간인 집단폭행 조직폭력배 검거(대전청 광수대)**
– '19. 3월~'20. 4월間 대전 도심에서 상대 조직원과 민간인을 집단폭행한 대전 · 경기지역 조직폭력배 35명 검거(구속 14)

제2절

일상생활 속 음성적 불법행위 엄단

경찰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는 풍속업소에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고,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서 국민 홍보 및 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의 관점에서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1. 불법 풍속영업에 대한 단속 활동 전개

가. 불법 풍속업소 집중 단속 추진

경찰청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풍속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성매매사범 3,161건을 단속하여 9,019명을 검거하고, 136명을 구속하였으며, 144,228개의 풍속업소에서 성매매 등 15,235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였다.

[표 4-6] 풍속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유흥	단란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 감상실	노래 연습장	게임 제공업	무도 학원	무도장
'18년	147,814	29,521	14,037	31,585	17,706	773	38,044	15,015	1,040	93
'19년	148,685	29,042	13,843	31,531	17,416	764	38,274	16,671	1,044	100
'20년	144,228	28,193	13,226	31,375	17,048	712	36,683	15,893	984	114

[표 4-7] 풍속영업소 위반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건)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45,237	38,413	32,111	20,356	15,235
성매매	11,045	8,311	6,891	5,225	3,161
변태영업	2,264	1,463	2,145	1,052	638
무 허 가	3,128	2,416	811	778	755
기 타	26,537	26,223	22,264	13,301	10,681

[표 4-8] 주요 풍속사범 조치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성매매		게임장	
	검거인원	구속	검거인원	구속
'19년	14,032	225	7,757	157
'20년	9,019	136	6,627	120
대 비	▼35.7	▼39.6	▼14.6	▼23.6

나.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그림 4-3]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신 · 변종업소가 학교 주변 및 주택가로 급격히 확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고 탈선 및 기타 범죄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매년 상 ·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 행정안전부 · 교육부 ·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집중단속 및 업소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학교 주변 유해업소 215건을 단속하였다.

다. 단속 활동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

경찰은 단속 활동의 공정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지자체, 소방, 교육청, NGO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표 4-9] 2020년도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 현황 (단위: 명)

계	경찰	지자체	소방	교사 · 교직원	종교인	시민단체	기타
3,488	1,045	1,103	123	314	1	660	242

라.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경찰청은 단속 경찰관과 업주와의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해 풍속업무담당자(계 · 팀장 포함) 적격심사 강화(경찰서장으로 위원장 격상, 적격심사 주기 6개월로 단축), 시 · 도경찰청 중심 권역별 풍속수사팀 운영, 시 · 도경찰청 주관 특별관리업소 지정 · 관리 후 집중단속, 강남권 반부패전담팀, 풍속사건 심의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비리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강남 클럽에서 발생한 마약류 유통 · 투약, 성폭행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떨어진 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유착 가능한 풍속업소 중심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 · 수사 활동을 통해 조직 내 자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2.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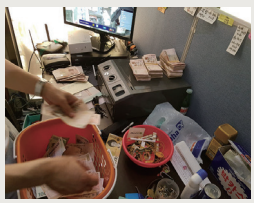
가. 합법 게임물 개·변조 등 불법 영업 지능화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1] 이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이 위축되고 있긴 하나 아직도 정상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 · 변조한 후 강철 문, CCTV, 감시원을 고용하여 경찰 단속망을 지능적으로 피해가며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가 있다.

[그림 4-4]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현장


창고형 게임장


강철 출입문


환전 증거품

1. 바다이야기 사건
'03~'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現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크린경마, 바다이야기 등 게임물을 사행성 여부 확인 없이 등급분류하면서 사행성게임장 급증
※ '04. 12. 7 '바다이야기'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2004-A1123)

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 추진

경찰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불법업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상「자료실」등 활용, 단속기법과 신 · 변종 업소 정보 및 최근 판결 등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또한, 경찰인재개발원 풍속업무 담당자 교육과정(연 6회)에 프로그램 개 · 변조 확인 방법과 같은 전문교육을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단속역량을 강화하여 2020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총 4,659건 5,436명을 검거(구속 118명)하였다.

향후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현장에서 프로그램 개 · 변조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표 4-10] 2020년 불법 게임장 유형별 단속실적

계	사행행위 환 전	개 · 변조	무등록	등급 미필	경품취급 기준위반	기타
4,659	846	581	142	166	330	2,594

3. 생활 주변의 기초질서 확립

보다 중대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되 건수 위주의 단속활동은 지양하고 신속 · 적정한 절차인 즉결심판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표 4-11]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 단속 통계 (단위 :건)

구분	위반내용					조치현황	
	계	쓰레기 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기타	즉결심판	통고처분
'18년	92,785	15,063	18,052	7,642	52,028	24,348	68,437
'19년	87,456	10,968	17,510	6,343	52,635	32,433	55,023
'20년	75,984	7,499	15,355	5,470	47,660	31,771	44,213

가. 경찰청·장발장 은행 업무협약 체결

'장발장 은행'은 시민 참여로 모은 성금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소년 · 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300만원(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은행으로,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중심 회복적 사법 실현에 기여하였다.

나.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경미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한 감경처분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위해 '19년 6월「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다.

[표 4-12]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심사인원(명)	6,373	6,404	6,888	6,217
처분 감경인원(명)	6,103	6,100	6,575	6,062
처분 감경비율(%)	95.8	95.4	95.5	97.5

[그림 4-5] 기초질서 홍보물



다. 기초질서 공익광고 제작·홍보

기초질서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 속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였다.

이에 '경범죄 예방'을 주제로 하는 공익광고를 다수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하철 전광판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를 하였다.

4.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가.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총포 · 화약류는 살상력 · 파괴력이 크고 오 · 남용 시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특히, 2016년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앞 사제총기 사고[2]로 경찰관이 사망하고, 2018년 봉화[3] 에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로 지자체 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테러이용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총포 · 화약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일련의 총기 사고를 계기로 2015년 모든 공기총을 경찰관서에 보관하고, 수렵 · 유해조수구제 등 필요시에만 출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안전관리대책」을 수립 ·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오패산터널 총기사고를 계기로 「불법 총기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봉화 총기 사고를 계기로 총기 소지허가, 보관해제 및 입 · 출고 시 심사 강화 등 총기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그간 연 1회 실시하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 집중단속을 2017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무허가 총포 제조 · 판매 · 임대 · 수출입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총포화약법」이 개정되었다.[4] 한편, 경찰, 사회복무요원, 누리캅스 등 민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합동으로 인터넷상 총

2.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사고
'16.10.19.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직접 제조한 사제총기를 발사하여 경찰관 1명 사망

3. 봉화 총기 사고
'18.8.21. 면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엽총을 발사하여 면사무소 공무원 2명 사망, 주민 1명 부상

4. '18.9.18.개정, '19.9.19. 시행

기 · 화약류 제조법 게시행위 단속 및 게시물 삭제 · 차단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불법무기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주요 안전관리 시책

1) 총기위치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2015년 수렵총기 출고 후 허가받은 장소를 이탈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회에서 총기 위치추적 필요성을 제기, 총기위치정보 수집 및 위반 시 제재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총기위치정보시스템을 개발 착수하였다.

2020년 현장테스트 등을 통해 기능 개발을 완료 후 환경부 · 지자체 · 수렵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 · 반영하여 2020~2021년 수렵기간에 맞춰 총기위치정보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미비점을 보완 후 전국 시행하여 총기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불법무기 자진신고 · 집중단속 확대 실시

그간 연 1회 실시하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2017년부터 연 2회로 확대(4월 · 9월 자진신고 / 5월 · 10월 집중단속) 운영하는 한편,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불법무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중 월남전 참전 시 소지하였던 권총 등 무허가 총기 332정을 수거하였으며, 실탄 등 화약류 43,349점을 수거하였다.

[표 4-13]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2020년)

총계	총기					도검 등	화약류
	소계	권총	엽총	공기총	기타총		
45,356	542	9	31	298	204	1,465	43,349

한편,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통해 총기 판매 글 게시행위 51명, 무허가 소총·엽총·공기총 등 소지 164명, 무허가 판매 12명 등 233명을 단속하였다.

[표 4-14]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적(2020년)

총계	판매 글 게시	무허가 소지	무허가 판매	용도 외 사용	제조법 게시
233	51	164	12	2	1

3) 개인 소지 총기 일제점검 실시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소지 허가된 125,185정 전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총기 소지 허가 결격사유 발생 여부 △총기 불법 개 · 변조 여부 △도난 · 분실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한 2,123정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였으며, 장기 미사용 총기 등 1,709정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제출 및 폐기하도록 하였다.

4) 수렵 총기 안전관리

2020.12.14.부터 2021.3.31.까지 강원도 내 5개 시 · 군에서 수렵장이 운영되었다. 수렵 기간 중 악용사고 및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수렵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수렵 총기 오 · 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표 4-15] 수렵 총기 안전관리 주요 대책

▶ 수렵 전 안전교육 시행
▶ 실탄 1일 구매량(400발→100발) 및 소지량(500발→200발) 축소
▶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수렵장으로 총기 운반 시 방아쇠 잠금장치 부착
▶ 수렵 총기는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 · 출고

그 결과, 수렵 기간 중 총기로 인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 4-16] 수렵기간 중 총기 사고 현황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발생건수		7건	0건	3건	0건
발생 경위	고의	1건	-	-	-
	과실	6건	-	3건	-
인명 피해	사망	-	-	-	-
	부상	8명	-	3건	-

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020. 6. 10.부터 2020. 7. 10.까지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진단을 통해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경찰 · 소방 ·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화약류 저장소(15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였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만료된 화약류 폐기,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등 현지 시정 · 보완 명령 등 경미 사안(18건)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했다.

5. 불법사금융 범죄 집중단속

가.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서민경제가 침체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금융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사항 및 성과

1) 국무조정실 주관「불법사금융 척결 TF」참여,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추진(4월~5월)

경찰은 국조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TF 참여, 금융위 · 금감원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불법광고차단 · 집중단속 ·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2)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실시(6.1.~12.31.)

경찰은 범부처 차원의 대응 기조에 맞춰 시 · 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광역수사대, 경찰서 지능 · 강력팀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별로 △유사수신 △다단계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이자제한법 위반을 단속하였다.

또한 금융위 · 금감원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신종영업수법을 포함 불법사금융 집중모니터링 및 피해신고 · 제보건 등을 중점담속, 온 ·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영업기반을 차단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20. 6. 1. ~ 12. 31. 7개월간 불법사금융범죄 총 1,793건 · 5,082명을 검거하고 50명을 구속하였다.

[표 4-17] 불법사금융 범죄 집중단속 성과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계	구속	불구속
유사수신	614	2,103	22	2,081
다단계	132	641	2	639
불법대부업	667	1,627	22	1,605
불법채권추심	212	407	4	403
이자제한 위반	168	304	-	304

아울러 시 · 도경찰청별로 운영 중인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하여 유사수신 · 불법다단계 피해금에 대해 몰수 ·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3)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6.22, 6차),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운영(6.29.~12.31.)

경찰은 대통령 주재 정부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단속기관 간 신고 · 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취약계층 대상 조직적 불법행위 및 신종수법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4) 경찰청「민생침해범죄 근절 추진단」운영(7월)

수사 · 사이버수사 등 관계 부서들이 참여하여 △다수 피해자가 양산되는 폰지사기(유사수신) △코로나19 확산 관련 무등록 다단계업 △조폭 등이 개입한 조직적 불법대부업 등 집중단속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단속 추진사항 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다. 향후 계획

향후 경찰은 경제적 · 사회적 약자를 대상 불법사금융을 지속 단속 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신종수법 등장 시 금융위 ·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3절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 시위문화 정착

1. 주요 내용

가. 2020년 집회시위 발생 현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찰부대가 배치된 집회 건수는 12,465건으로 전년 13,864건보다 1,399건(10%)이 감소하였고, 의경폐지에 따른 경찰부대 규모 감축에 따라 동원된 경찰부대는 16,810개 부대로 전년 26,687개 부대보다 9,877개(37%) 부대가 감소하였다.

[표 4-18] 경찰부대가 배치된 집회시위 건수 등 현황(2019 · 2020년)

구분	경찰부대가 배치된 집회시위 수(건)	경찰부대(개)	경찰 부상자(명)
'20년	12,465	16,810	31
'19년	13,864	26,687	76
전년대비	-1,399	-9,877	-45
(%)	(-10%)	(-37%)	(-59%)

[표 4-19] 최근 5년간 경찰부대가 배치된 집회시위 현황 (단위: 건)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집회시위	11,061	10,438	9,627	13,864	12,465

나. 법과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지는 집회시위문화 정착

경찰은 연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수인원 집결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적 집회관리에 주력하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을 불문하고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그림 4-6] 방역적 집회 대응



특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불법집회로 인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거나 전국적 확산의 계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부대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페이스쉴드', '라텍스 장갑' 등 충분한 방역물품을 적시에 보급하고 집회 출동 전 · 후 '발열체크' 및 '선제적 코로나19 검사'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집회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 안전 보장을 위해 경찰 채증활동의 범위 · 절차를 명확히 내용 등을 보완하여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을 개정('21.1월)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2월)을 통해 최고소음도를 도입하고, 심야 ·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평온권 보호를 위해 법적 ·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2. 주요 집회시위

가. 광복절(8.15.) 집회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지자체에서 고시한 집회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이 광화문광장 등 도심에 집결하였다.

경찰은 가용 경찰부대를 동원하여 해산명령불응 ·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자를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경찰의 집회 대응 과정에서 다수의 참가자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했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에 배치된 모든 경찰관과 의경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4-7] 시민 셔틀버스



[그림 4-8] 시민통행로



[그림 4-9] 종교인 보호팀



나. 개천절(10.3.)·한글날(10.9.) 집회

개천절(10.3.)과 한글날(10.9.) 광화문광장 일대 등 도심권 집회금지구역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었다.

경찰은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경찰부대를 동원하고, 펜스 등 안전장비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경찰의 현장 조치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로 · 사직로 구간 '시민 셔틀버스'를 운용하고, 통행 안내 경찰관을 곳곳에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 사드기지 공사차량 진출입 상황

경찰은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충분한 경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드기지 환경 개선 공사차량 등의 기지 진출입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집회참가자 중 다수인원이 여성 · 노약자 · 종교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경부대를 배치하고, 대화경찰과 함께 종교인보호팀 · 인권보호팀 등도 적극 운영하였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구급차를 상시 배치하고 위험지역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제4절

테러·재난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1. 국내외 테러정세와 테러양상

가. 국제 테러정세

2020년에는 전세계 54개국에서 총 1,951건의 테러와 14,4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테러건수(+17.3%)와 사망자(+7.5%)가 모두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 · 아프리카(56%), 아시아 · 태평양(41.5%), 유럽(1.5%), 미주(1.2%) 순으로, 국가별로는 아프가니스탄(564건), 나이지리아(329건), 시리아(282건), 이라크(148건), 파키스탄(80건), 인도(72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표 4-20]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빈도	3,542	3,928	4,096	3,736	2,255	1,533	1,978	2,079	1,663	1,951
사망	8,803	9,869	11,889	15,909	17,329	8,356	8,299	7,916	7,637	8,207

ISIS가 중동에서 패퇴한('19.3.)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치안 공백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틈타 군인,경찰 등 치안전력과 외국계 기업, 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공세를 강화한 결과 아프리카 내 테러사건이 2019년보다 크게 증가(+32%)하였다.

2020년 국제 테러정세의 주요 특징은 ① 분쟁지역에서 사회혼란을 틈탄 테러세력의 확산 ② ISIS, 알카에다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상호 경쟁 심화 ③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테러단체의 선전전 증가 ④ 서방권내 극우주의 득세 등 4대 이슈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ISIS,알카에다는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 · 태지역에서 현지 무장단체들과 연대, 토착세력을 형성해가면서 자금을 모금하고 조직원 모집에 주력하였다. 이들은 중앙집권적 지휘체제에서 벗어나, 전 세계 추종세력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조직원 모집에서부터 자금조달과 테러작전 수행 등 조직운영 전반을 독자적으로 관장토록 하였다. 또한, 내전 등으로 치안이 불안한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말리, 모잠비크 등지에서 반정부 단체 조직원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조직원을 확충하였다.

둘째, 정통성을 강조하는 ISIS와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추구하는 알카에다가 서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ISIS의 중동 패퇴('19.3.)이후 양 세력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ISIS 대사하라 지부(ISGS)와 알카에다 연계조직(JNIM)이 조직원 영입을 두고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마찰을 빚다가 말리 북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5.7.)한 이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테러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자금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비대면 활동을 강화하였다. ISIS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외국인테러전투원(FTF) 및 자금 이동 등 테러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온라인으로 "자체 책임하에 코로나 검사장 등을 겨냥한 대서방 테러를 계속하라"고 선동하였다. 알카에다는 '19.5 산하단체들에게 비트코인 거래 수법을 하달하는가 하면,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계속 시도하는 등 사이버상 테러자금 모금에도 주력하였다.

넷째, 서방권에서는 '플로이드' 사망(5.25)으로 촉발된 미국 BLM 운동(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과 안티파(반 파시스트) 등 극좌시위가 극우세력과 충돌하면서 집단폭력, 테러위협이 확산되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BLM 운동 확산을 계기로 전면에 나서면서 시위대를 겨냥한 차량돌진, 상대 진영이나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총기난사 등 극단적 폭력성을 표출하였다. 한편, 유럽에서는 프랑스 언론의 '무함마드' 만평 게재(9.1.)로 인해 서방과 이슬람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프랑스 교사 참수(10.16), 오스트리아 빈 총기난사(11.2)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생테러 위협이 한층 고조되었다.

나. 국내 테러정세

2020년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테러조직의 온라인 선전에 동조하였거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행위가 지속 발생하였는데, 2020년에는 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테러위험인물 38명이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특히, 알카에다 연계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중앙아시아인 2명을 적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UN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7월)에 '사법처리 사례'로 최초 인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무슬림 2명이 프랑스 언론의 무함마드 비하만평에 반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협박전단을 부착하는 사건이 발생(11.1.)하였다. 이 사건은 글로벌 테러정세의 국내 파급력을 확인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사회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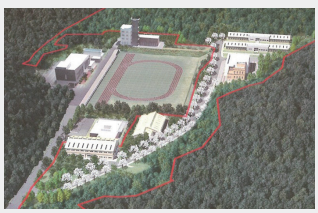
또한, ISIS 등이 코로나19에 편승, 온라인 선전전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에서 테러위협, 선전물을 차단한 건수도 3배 넘게 급증('19년 80건, '20년 288건)하였다. 국내 체류 무슬림들이 온라인상 선전 · 선동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지속 포착되고 있으며, 전주 아파트 사제폭탄 폭발사건(10.17.)처럼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한 후 범죄에 사용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과 정부의 선제적 신변안전 유의 권고로 우리 국민 · 시설에 대한 테러피해가 없었다. 다만, 헝가리 소재 우리 기업 공장(2.5.)과 주 인도 우리 공관(4.23.)에 대한 폭파 협박으로 대테러 경계 태세가 강화되기도 하였으며, 서아프리카 해상에서는 우리 선원 8명이 나이지리아 해적에 납치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서방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정서가 확산되어 우리 국민들의 폭행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가. 경찰 대테러 조직 · 인력 · 장비 확대

[그림 4-10] 경찰견종합훈련센터



세종 · 전북 · 경북지역의 테러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종 · 전북 · 경북특공대를 창설(11월)하여 전국 13개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의 대테러 · 안전활동을 책임감 있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관(82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대테러기동대를 신설(1월)하였다.

경찰견 양성과 전문연구를 수행하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개소(6월)하고 '경찰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찰견 활용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양성 ·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림 4-11] 전파차단기



전국 경찰특공대에 신형 장갑차, 드론테러 대비 전파차단기 등 총 42종 112억 원(전년대비 27% 증가) 상당의 대테러 장비도 도입 · 보급하였다.

나. 경찰 대테러활동 관련 규칙·매뉴얼의 제·개정

「국내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개정(9월)하여 드론테러 대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의 복잡한 테러유형을 정비하는 등 신유형 테러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였다.

경찰관서에서 정기적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지도 · 점검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설관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을 개정(9월)하였다.

다. 테러취약시설·국가중요행사 안전관리

외국공관저, 국회 및 정부청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의경부대 폐지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외국공관저는 위해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경력배치 △장비보급 △지역경찰 연계순찰 등 등급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유형별 대응절차를 확립하였다.

국가중요시설 · 다중이용시설 · 외국공관저 등 전국 2,291개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지도 · 점검(7,945회) △특공대 현장배치(6,516회) △ 관계기관 합동훈련(1,140회) △시설종사자 대상 테러예방 교육(2,664회, 15,821명)을 실시하였다.

라. 국제테러 예방활동 전개

FBI · 인터폴 등 해외 대테러 정보 ·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국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터폴 등 국제 대테러 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경찰청도 참가하여 최신 국제 테러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FBI 산하 기관인 美 테러리스트감시센터(TSC)와 '테러위험인물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조회 권한을 획득하는 등 국제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테러위험인물을 검거 또는 강제 퇴거하는 등 국내 테러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 과학적 대테러활동 및 대테러 전문연구 수행

경찰청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에 테러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의 정보를 등록하여 위치를 시각화하고 관서별 · 지역별로 분석하여 대테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인공지능(AI) · 자율주행차 · 드론 · 총기 · 폭발물 · 경찰견 · 사이버테러 등 시의성 높고 대테러 업무에서 발전이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총 12편(380쪽 분량)의 「제43호 대테러연구」를 발간하여 대테러정책 수립 및 각급 관서 대테러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바. 현장역량 제고 중심의 교육훈련 실시

[그림 4-12] 국가대테러부대 연합훈련



경찰청 주관으로 동시다발 · 복합테러 대비 관계기관 간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 대테러부대 연합훈련'을 개최(10월)하였다. 경찰 · 해경 · 군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드론테러에 대비한 실전훈련(FTX)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신임 경찰서장 등 현장지휘관(220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초동조치팀장으로서 관계기관 통합 지휘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경찰관 테러 현장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폭발물 · 화생방테러 대응 순회 ·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특공대는 군 · 해경 ·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과 폭발물처리 교류훈련을 실시하여 폭발물테러 대응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3. 재해·재난 대응역량 제고

가. 개요

2020년에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그 밖에 산불 ·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경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교육·훈련과 장비 보급을 통해 재해 ·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나. 주요 추진사항

1) 재난관리장비 보급 확대

각종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한 K5 방독면, 화생방 통합형 보호복, 방사능 선량계 등 보호장구와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조구급장비를 구매 · 보급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레벨D형 보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긴급하게 확보하여 보급함으로써 현장 경찰관의 감염을 최소화하였다.

2) 교육 ·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경찰은 그간 대한적십자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강사를 초빙하여 전 경찰관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모두 중단되었고,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안전한국 훈련과 민방위훈련도 취소되었다.

경찰은 이처럼 제한된 상황에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훈련 등 관계기관·지자체와 합동으로 934회의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장비 사용법 등 재난안전교육을 173회 실시하였다. 대면 교육·훈련은 집합인원을 최소화하고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하였고, 레벨D 보호복 착 · 탈의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폴넷 게시판, 사이버교육포털에 게시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확인하고 익힐 수 있게 하였다.

다. 2020년 주요 재난관리 활동

경찰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태풍 · 집중호우, 산불 등 각종 재난현장에 연인원 60만 명의 경찰관을 투입하여 질서유지, 교통통제, 인명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경찰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서별 재난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5종 16건의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1년 내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였다.

[표 4-21] 2020년 경찰청 재난상황실 설치 현황

구분	기 간	재난 지역
감염병	코로나19 1. 20.~ (계속)	전국
가축질병	ASF '19. 9. 17.~ (계속)	인천, 경기남 · 북부, 강원
	AI 12. 1.~12. 3. (3일간)	경북 상주
풍수해	강풍 3. 19.~3. 20. (2일간)	전북
	강풍 4. 24.~4. 25. (2일간)	전북
	집중호우 7.23.~8.16. (25일간)	전국
	태풍 장미 8. 9.~8. 12. (4일간)	부산, 전북, 경북, 제주
	태풍 바비 8. 24.~8. 28. (5일간)	전국
	태풍 마이삭 9. 1.~9. 3. (3일간)	전국
	태풍 하이선 9. 3.~9. 8. (6일간)	전국
산불	울주산불 3. 19.~3. 20. (2일간)	울산(울주)
	안동산불 4. 24.~4. 26. (3일간)	경북(안동)
	고성산불 5. 1.~5. 2. (2일간)	강원(고성)
화재	이천물류센터 4. 29.~5. 26. (28일간)	경기남부(이천)
	용인물류센터 7. 21.~8. 20. (31일간)	경기남부(용인)
	울산주상복합 10. 9.~10. 10. (2일간)	울산 남구

1) 코로나19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연말까지 누적 확진자 61,769명, 사망자 917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은 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였으며, 연인원 296,833명을 투입하여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치료센터 · 임시생활시설 질서유지, 불법행위 단속 · 수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방역대책의 이행을 지원하였다. 경찰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은 제1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 집중호우 · 태풍

2020년 한반도 집중호우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 역대 2위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국내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총 4개였으며 이 중 제8호 부터 제10호까지 3차례의 강력한 태풍이 장마 이후 연이어 상륙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2020년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는 56명, 재산피해는 1조 2,887억 원으로 최근 10년 평균(15.3명 / 3,883억 원)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찰관과 경찰관서 · 장비 등의 피해도 발생하였다. 8월 6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인공수초섬 유실방지 작업 중 선박이 전복되면서 경찰관 한 명을 포함하여 공무원 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다. 순찰이나 신고처리 중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낙하 · 비산물에 의한 타박상, 열상 등 경상을 입은 경찰관도 4명 있었다. 경찰관서의 경우 경찰인재개발원 본관 뒤편 등 일부 구역에서 토사유출과 침수가 발생하였고,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경남하동경찰서 화개파출소 1층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다. 그 밖에 천안서북경찰서 순찰차가 침수되는 등 시설물 피해 6건, 차량 피해 16건, 정전 28건 등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장마에 앞서 6월 26일 「2020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에 따라 24시간 철저한 상황관리, 중대본·지대본 협력체계 구축, 선제적 예방순찰 등에 만전을 기하였다. 기상예보에 따라 피해우려지역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였으며 행안부 등 주재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상황점검회의에 12차례 참석하여 상황을 공유하였다. 경찰은

[그림 4-14] 춘천 의암호 실종자 수색



[그림 4-15] 태풍에 전도된 가로수 긴급조치



[그림 4-16] 침수도로 통제



[그림 4-17] 수해복구 지원



연인원 267,982명을 투입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방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에 주력하여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요소 48,744개소를 점검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조치하기도 하였다. 또,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복구지원 상황실'을 설치하여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찰의 수해복구활동을 총괄하였다.

3) 산불

[그림 4-18] 산불대책회의



2020년 한 해 동안 6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림2,915.53ha가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474건, 1,120ha) 대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3월 19일 울산 울주, 4월 24일 경북 안동, 5월 1일 강원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020년 전체 피해 면적의 89%에 달하는 피해를 남겼다. 3건의 산불로 인해 사망 2명, 부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약 1,0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림피해는 총 2,586ha였다.

경찰은 산불의 조기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청·지자체·소방·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산림청 주관 '산불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여하여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산불 발생 시 국가지도통신망을 활용한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현장상황을 공유하였다. 산불 발생 시,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진출하여 주민대피와 교통관리를 지휘하고, 비상소집을 통해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연인원 3,982명의 경찰관이 산불 현장에 투입되어 긴급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교통관리, 주민대피 등을 지원하였으며, 산불 진화 후에는 국과수 · 소방 등과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원인 조사를 지원하였다.

[그림 4-19] 화재현장감식



주요사례로 안동 산불 당시 비상소집되어 주민대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택 내부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대피안내방송을 듣지 못한 채 자고 있던 노인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대피시켰고, 고성 산불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던 중 산속에 홀로 주차된 차량을 이상하게 여겨 산불 발생 사실을 모르고 등산 중이던 차주에게 연락하여 하산하도록 안내하였다. 또, 거동이 불편하고 귀중품이 집에 있다는 이유로 대피를 거부하는 노인들을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설득하여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였다.

제5절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빈틈없는 선거치안 확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인구 51,843,268명 중 유권자가 43,994,247명이고 이중 66.2%에 해당하는 29,126,396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투표 당일인 4월 15일 개표 종료 시까지 14일간 경찰청 및 전국 시 · 도경찰청 · 경찰서에 274개의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운영했다.

특히, 4월 2일부터 비상근무(경계강화)에 들어가 사전투표일에는 지휘관 및 관련 기능 참모가 정위치 근무를 실시하였다. 투표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여 최대 경찰력을 배치했으며, 전국 14,330개의 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 등 경비대상 4만 4천여 곳에 延 6만 4천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하여 평온한 선거치안을 확보하였다.

2. 선거범죄 및 사이버상 선거 방해 행위 엄단

가. 추진배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2020년 4월 15일「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 및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나. 단계별 단속체제 강화 및 선거수사 전문성 제고

효과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단계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구축, 단계에 따른 주요 선거범죄 발생 억제로 '안정적인 선거치안'을 확보하였다.

[표 4-22] 선거사범 단계별 단속체제

구 분	기 간	중점 추진 내용
〈1단계〉 단속체제 가동	'19.12.16. ~'20.2.13. (59일간)	• 각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 편성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합동 홍보 · 교육 등 실시 • 설('20.1.25.) 전후 선거사범 엄정대응
〈2단계〉 24시간 대응체제운영	2.14.~3.25. (40일간)	• 「선거상황실」 가동, 즉응태세 구축 ※수사전담반 증원, 관리요원 보강 등 • 각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 증원
〈3단계〉 全 기능 총력대응	3.26.~4.29. (34일간)	• 선거운동 기간(4.2.~4.14.) 및 선거(사전선거)일 全 기능 총력대응 • 선거일 이후 관련 사건 신속 마무리

또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속 역량을 재정비하였으며,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였다.

다. 유관기관 협업 강화, 안정적 선거치안 확보

경찰의 공직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 등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선거 관련 유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건의 원활한 이첩 등 협업을 강화하였다.

라. 단속 성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단속 결과, 총 1,256건 2,241명을 단속하였고, 그 중 혐의가 중한 21명을 구속하였다.

[표 4-23] 선거사범 단계별 단속체제

총 계 (명)	조 치 별(명)			유 형 별(명)					
	기소		불기소 등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개입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기타
	구속	불구속							
2,241	21	817	1,403	203 (9.1%)	478 (21.3%)	44 (2.0%)	12 (0.5%)	230 (10.3%)	1,274 (56.8%)

유형별로는 △거짓말선거(21.3%) △선거폭력(10.3%) △금품선거(9.1%) 順이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단속 인원이 감소하였는데(24.8%p↓), 사회 전반의 공명선거 의식이 확산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중요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불법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제6절

안보수사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

1. 국정원법 개정 주요 내용

가. 개정 배경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20년 12월 13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통제장치와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정원장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재적 2/3 이상 찬성) △모든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등 조항을 통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 조직 설치 금지 △정치 관여 금지 유형 확대 △직원의 불법 감청 등 금지 및 처벌조항 등을 신설하여 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2) 국정원 직무 범위의 명확화

국내 정보수집의 근거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 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국외 및 북한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형법(내란·외환)·군형법(반란, 암호 부정 사용)·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 침해행위 △사이버안보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로 한정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3) 대공수사권 폐지

국회는 국정원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폐지하되, 그 시행을 3년간 유예(부칙제3조, '24.1.1. 시행) 하였다.

4)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안보수사 관련 정보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불식을 위해 국정원에 행정조사기본법에 준하는 조사권 규정을 신설하였다.

[표 4-24] 국정원 직무별 적용범위 비교표

구분	정보 수집	행정조사권	수사기관과의 협력
국외 및 북한	○	×	×
방첩 · 대테러 · 국제범죄조직	○	○	○
형법(내란 · 외환) 군형법(반란, 암호 부정사용) 군사기밀보호법	○	○	○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침해행위	○	○	○
사이버안보 및 우주 정보	○	○	×

※ 다만, △형법(내란·외환) △군형법(반란, 암호 부정사용)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권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 시점인 '24.1.1.부터 적용

2. 안보수사국 신설 추진

가.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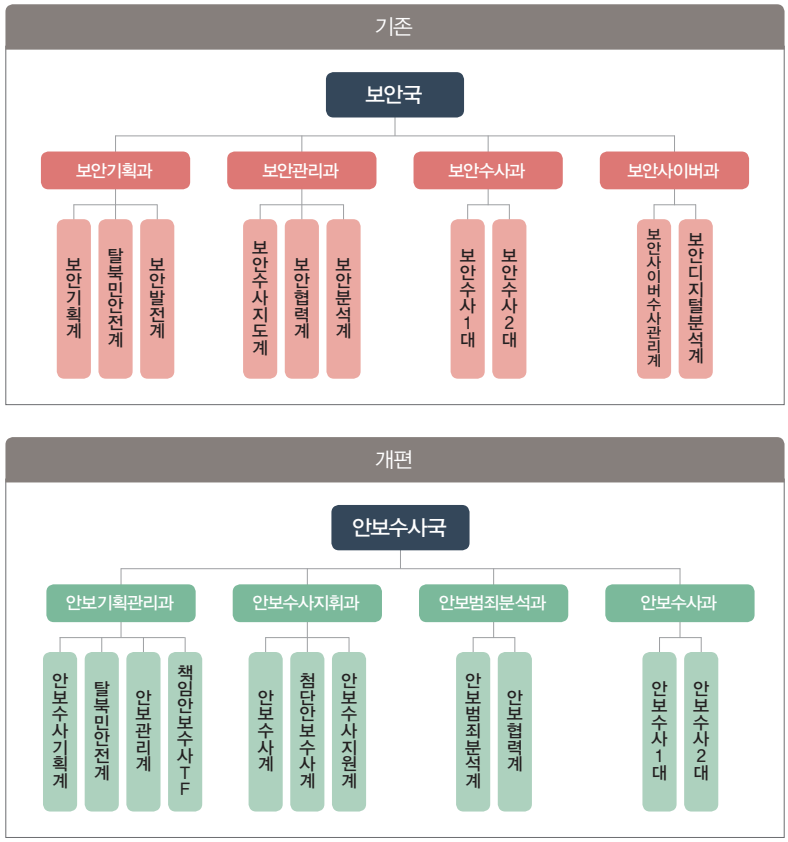
경찰청(보안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하여 국가 안보수사 역량 총량이 유지되도록 보안국을 안보수사 전문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조직 개편 및 업무영역 확장

기존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 으로 편제하고 조직 내 안보수사 사무를 통합, 안보수사 단계(첩보수집–분석–수사지휘–수사)에 맞춘 課단위 기구 구성을 계획하였다.

또한, 다양해지는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위주로 국한된 안보수사 분야를 산업기술유출, 외국인 간첩, 테러, 경제안보사범 등으로 확대하였다.

[표 4–25] 경찰청 안보수사국 개편 후 조직도(案)



3. 안보수사 역량 강화 3개년 계획 추진

가. 추진 배경

대공수사권 이관 시기가 2024년 1월 1일로 정해짐에 따라 3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원활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수사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 안보수사 역량강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주요 내용

1) 안보수사 인프라 구축

기존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업무 진단을 통해 첩보 분석기능과 직접 수사를 강화하고 새로 추가된 테러 · 산업기술유출 등 외사 분야의 수사 인력을 이관받는 등 안보수사 전문 조직 신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안보수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 · 시스템 · 예산 등을 재정비하여 △안보수사 업무처리규정(가칭) 제정 △안보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안보수사 예산 통합지침 마련 등의 중장기 과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 안보수사 전문성 제고

우수한 내부 인재 확보를 목표로 매년 전국 안보수사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인적 쇄신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안보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국정원 인력을 경찰에 채용하기 위해 국회 및 유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며, 안보수사 영역 확장에 대비하여 '21년부터 3년간 △외국어 전문가 △국제안보 △방첩 · 대테러 △경제안보침해 네 개 분야에 총 65명의 전문요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유능한 외부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표 4-26] 분야별 전문가 채용 계획

국제안보(10명)	국제법, 국제정치, 안보, 국제학, 정치외교학
방첩 · 대테러(10명)	군사, 무기체계, 방위산업, 화생방, 사이버, 통신
경제안보침해(10명)	국제경제, 국제무역, 경제, 회계
외국어(35명)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외에도 체계적인 안보수사관 양성을 위한 '안보수사 연구 교육센터'와 국정원 수사기법의 온전한 전수를 위한 '안보수사 특별 교육과정' 등의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3) 국내외 정보 공유 · 협력체계 구축

안보수사의 성패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에 있는 만큼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안보정보를 집적하고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초국가적 범죄 양상을 띠는 안보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 안보기관(국정원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더불어 경찰의 독자적인 해외 안보수사망 구축을 위해 외국 안보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모색 중이다.

4) 인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

경찰청에서는 안보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절차상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보수사국 내부 심의기구(안보사건 평가회의)의 심의를 강화하고, 공판절차를 관리 · 감독하는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보수사 조정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권보장제도가 안보수사 현장에도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인권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 대공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